

학생인권에 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때 : 2010년 10월 18일(월) 11:00

■ 곳 : 한국건강연대 강당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불교인권위원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 차 례 ■

1. 조사 결과 발표

- 공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

2. 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 1 - 학부모

- 김태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3. 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 2 - 교사

- 서울 교사

학생인권에 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의식 조사

◎ 조사기관 : 참교육연구소

구분	내용		
	교사	학생	학부모
모집단	전국에 있는 교사	수도권 중고등학생	수도권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조사기간	2010년 9월 29일~10월 7일		
표본크기	1478명	1885명	959명
표본추출방법	온라인메일을 수신한 응답자	지역별 임의 할당	지역별 임의 할당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질문지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질문지법
표본오차	95% 신뢰도 수준에 오차범위 ±2.6%	95% 신뢰도 수준에 오차범위 ±2.2%	95% 신뢰도 수준에 오차범위 ±3.1%

◎ 분석 도구 : SPSS12.0K 통계 프로그램

◎ 표본의 특성

교사		빈도	%
성별	남	762	52.8%
	여	680	47.2%
나이	20대	57	4.0%
	30대	445	31.2%
	40대	644	45.2%
	50대이상	279	19.6%
급별	초등학교	433	30.4%
	중학교	437	30.7%
	고등학교	555	38.9%
지역	대도시	685	48.0%
	중소도시	479	33.6%
	읍면지역	262	18.4%
표 합계		1478	100.0%

학생		빈도	%
성별	남	920	49.2%
	여	951	50.8%
구분	국공립	1303	70.1%
	사립	555	29.9%
급별	중학교	669	35.9%
	일반계고	927	49.7%
	전문계고	268	14.4%
지역	서울	888	47.6%
	경기	527	28.2%
	인천	452	24.2%
표 합계		1885	100.0%

학부모		빈도	%
성별	남	206	21.8%
	여	739	78.2%
급별	초등학교	28	3.0%
	중학교	805	85.8%
	고등학교	105	11.2%
나이	30대이하	349	37.1%
	40대	456	48.5%
	50대	132	14.0%
	60대이상	4	.4%
지역	서울	429	46.1%
	경기	271	29.1%
	인천	231	24.8%
표 합계		959	100.0%

- 발표 하며 -

학생인권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학생인권 운동, 특히 2005년부터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고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여러 곳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을 시작으로 체벌금지 조치, 학칙 개정 조치 등이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환영하고 있으며 여러 교육·시민·인권단체들 또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학생인권 보장에 대해 우려를 보내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부각시키는 측도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서울본부’에서는 참교육연구소에 의뢰하여 학생인권과 학생인권조례에 관해 수도권 학생, 학부모들 그리고 전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학생, 교사, 학부모들은 대체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일부 언론과 단체 등이 제기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우려들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하는 것이라는 인식 또한 잘못된 면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전반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왔다. 학부모들은 학교가 입시기관이기보다는 학생들의 인생과 가치관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길 바란다는 경우가 많았으며,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과제로 ▲민주적 참여 보장 ▲입시경쟁교육 해소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교사의 업무 경감 및 지원 강화 등이 꼽혔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앞으로 학교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작은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

1. 학생인권조례 제정 필요성

○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학생)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학생	53.0%	35.6%	3.2%	2.0%	6.3%
학부모	26.6%	61.0%	6.8%	0.9%	4.8%
교사	45.8%	42.9%	8.3%	1.5%	1.4%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모두 물었다. 학생들은 “매우 필요하다”라고 답한 사람이 53.0%로 그 필요성에 큰 공감을 보였다. 교사들 중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한 사람은 88.7%, 학부모는 87.6%로 역시 대다수가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우려에 얼마만큼 동감하는지

“학생인권은 학교에서 알아서 잘 보장할 수 있으며 학생인권조례 같은 제도는 불필요하다.”				
	매우 동감한다	대체로 동감한다	별로 동감하지 않는다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

학생	4.2%	15.1%	34.4%	46.2%
학부모	3.8%	26.3%	46.5%	23.5%
교사	1.7%	11.3%	34.6%	52.3%
“인권을 보장하면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어 학교폭력이 늘어나게 된다”				
	매우 동감한다	대체로 동감한다	별로 동감하지 않는다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
학생	8.1%	28.6%	35.2%	28.1%
학부모	6.3%	36.6%	39.8%	17.2%
교사	4.5%	13.4%	34.8%	47.3%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면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하지 않아 사교육이 늘어나게 된다”				
	매우 동감한다	대체로 동감한다	별로 동감하지 않는다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
학생	8.0%	29.5%	34.4%	28.1%
학부모	7.7%	35.3%	43.6%	13.4%
교사	2.5%	12.5%	35.0%	50.0%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				
	매우 동감한다	대체로 동감한다	별로 동감하지 않는다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
학생	4.0%	9.4%	25.7%	61.0%
학부모	2.9%	14.9%	44.7%	37.4%
교사	1.4%	5.1%	24.6%	68.9%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사의 권리와 노동환경이 나빠진다”				
	매우 동감한다	대체로 동감한다	별로 동감하지 않는다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
학생	6.4%	17.8%	33.2%	42.6%
학부모	4.0%	21.2%	48.2%	26.7%
교사	3.7%	13.7%	35.1%	47.5%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우려의 내용들에 대해 얼마나 동감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학교폭력과 사교육에 관한 우려에 대해서 “대체로 동감한다”라는 답이 다소 높게 나온 것 외에는 동감하지 않는다는 답이 더 많았다. 학교폭력과 사교육에 관한 우려에서도 동감하지 않는다는 답이 학생 63.3%, 학부모 57.0% (학교폭력), 학생 62.5%, 학부모 57.0% (사교육) 더 많다. 이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관해 언론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우려가 상당히 과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을 포기하는 것, 반교육적인 것이라는 주장이나 교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등은 전혀 동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학교폭력과 사교육의 경우는 학교폭력과 사교육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치들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체 벌

○ 체벌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교사)

없어져야 한다	없어져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나 교육여건 가운데서는 불가	있어야 한다
60.3%	32.8%	7.0%

교사들 중 대다수가 체벌이 없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이 있어야 한다고 답한 교사는 단 7.0%에 지나지 않았다.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면 체벌을 없애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학교에서 체벌을 받았는지 (학생) ○ 학교 체벌이 잘못을 알고 고치는 데 영향이 있었는지 (학생)

받았다	받지 않았다	그렇다 (영향 있음)	아니다 (영향 없음)
69.9%	30.1%	39.1%	60.9%

학생들 중 다수가 체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 중 60.9%는 체벌이 잘못을 알고 고치는 데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체벌이 잘못을 알고 고치는 데 영향이 있었다고 한 경우에도 그 모두가 체벌 외의 다른 방법으로 지도가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임을 고려하면, 체벌이 교육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거나 효과가 있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 체벌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빈도로 하는지 (교사) - 학교급별 분석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할 때가 있다	일정한 원칙을 세워놓고 그 한계 내에서 교육적 체벌을 한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체벌하는 편이다
초등학교	30.8% (133)	54.2% (234)	11.3% (49)	3.7% (16)
중학교	19.3% (84)	56.9% (248)	19.5% (85)	4.4% (19)
고등학교	34.7% (192)	45.3% (251)	16.4% (91)	3.6% (20)
합계	28.7%	51.5%	16.0%	3.8%

χ^2 검정 : χ^2 값은 37.865이며 $p=0.00$ 이다. 학교급과 교사들이 체벌을 하는 것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교사들의 경우에 체벌을 전혀 하지 않거나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거의 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하는 교사들이 51.5%로 과반을 차지하는데, 교사들이 체벌이 없어져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이러한 교사들은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면 충분히 체벌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중학교에 체벌을 하는 교사들의 비율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중학교에 좀 더 세심한 지원과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 학교에서 체벌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로 2가지 고른 것(교사)

두발-복장 문제	학교에 지각, 결석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에 지각, 결과	
11.2%	7.7%	6.5%	
과제를 안 했거나 수업태도가 안 좋아서	성적 문제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저항	학생 간 폭력, 절도, 기물파손 등
54.1%	0.7%	58.8%	27.8%

○ 학교에서 체벌을 받았다고 답한 1250명(69.9%)의 학생들이 체벌의 주된 이유로 모두 고른 것

두발-복장 문제	학교에 지각, 결석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에 지각, 결과	과제를 안 했거나 수업태도가 안 좋아서
41.0%	33.2%	19.1%	56.8%
성적 문제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저항	학생 간 폭력, 절도, 기물파손 등	이유없이
18.5%	19.4%	10.6%	12.6%

(※ %는 1250명 중에서의 비율)

교사들은 체벌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로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저항”, “과제를 안 했거나 수업태도가 안 좋아서”, “학생 간 폭력, 절도, 기물파손 등” 이 셋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학생들은 “과제를 안 했거나 수업태도가 안 좋아서”를 선택한 답이 높은 것은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지였지만 그 외에는 “두발-복장 문제” “학교에 지각, 결석”을 많이 꼽았다. 교사들과 학생들이 서로 체벌에 대해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지시에 불응하거나 저항하고 폭력, 절도 등을 저질러서 어쩔 수 없이 체벌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은 용의복장단속이나 지각 등을 했을 때 체벌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 생활 규정을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민주적으로 바꾸기만 해도 학생들이 경험하는 체벌의 상당 부분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수업 태도 등과 관련해서 체벌이 많다고 응답한 것을 볼 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 자발적,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수업을 더 잘 지원할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

○ 요즘 체벌이 줄었는지 (학생) - 지역별 분석

	줄었다	똑같다	늘어났다
서울	62.4% (362)	32.8% (190)	4.8% (28)
경기도	51.8% (226)	41.5% (181)	6.7% (29)
인천	42.1% (159)	51.3% (194)	6.6% (25)
합계	53.5% (747)	40.6% (565)	5.9% (82)

χ^2 검정 : χ^2 값은 39.539이며 $p=0.00$ 이다. 즉 지역과 체벌 감소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전반적으로 체벌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게 해준다. 학생인권에 대해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체벌금지에 대해 공론화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의 학교에서 체벌이 더욱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올해 2학기에 체벌금지 조치를 취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체벌이 줄지 않고 똑같다거나 늘어났다는 답 또한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체벌의 대체별로 거론되는 상벌점제가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학생)

아주 효과가 있다	조금은 효과가 있다	별로 효과가 없다	전혀 효과가 없다
5.2%	36.9%	33.4%	24.5%

대부분의 학교에 존재하는 상벌점제에 대해 학생들 중 다수는 실제 교육적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다. 상벌점제가 학생들의 생활을 점수로 통제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학생들이 잘못을 고치게 만들기보다는 점수에 따라 타율적으로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체벌의 대안은 체벌과 같은 발상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처벌하느냐가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 체벌 대신 학생 지도 수단으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교사) (2개 선택)

교내 청소나 봉사	독서, 글쓰기	학생에게 맞춘 특별교육, 전문가와의 상담 및 치료	
15.6%	10.9%	68.9%	
사회단체 봉사활동	상벌점제	성찰교실	
13.9%	14.5%	36.7%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대신 학생에게 맞춘 특별교육이나, 상담 및 치료를 통해 지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답한 게 68.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성찰교실이 효과적이라고 답한 것이 36.7%로 많았다. 상벌점제 등은 역시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적었다. 이는 학생이 잘못했을 때 학생들에게 강제로 ‘벌’을 주는 방법보다는 대화,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교육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체벌금지 조치는 이러한 대안적이고 교육적인 방법들을 지원하고 장려하면서 이루어져야만 더 효과적일 것이다.

○ 학교에서 체벌이 없어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교사) (2개 선택)

엄격하고 구체적인 학생 지도 규정 마련	교사의 인식 변화, 통제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생활지도를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분담 시스템 확립
46.7%	51.5%	46.0%	15.9%
학교사회사업가,	생활지도부들	학교관리자의	교육청의 교사

전문상담사(교사) 충원	학생인권복지부로 개편	학생인권연수 의무화	직무연수시 학생인권연수 배치
23.1%	2.8%	4.3%	1.9%

교사들은 학교에서 차별이 없어지기 위해 교사들 자신의 인식,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는 엄격하고 구체적인 학생 지도 규정의 마련,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고 꼽았다.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학교, 민주적인 법치가 이루어지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실태

○ 보충수업, 방과후학습, 자율학습 등에 어떻게 참가하는지 (학생) - 학교별 분석

	학교	강제적	반강제적	자발적	참여하지 않음
방과후학교 ·보충수업	중학교	18.5%	15.3%	30.2%	36.0%
	일반계고	44.8%	24.2%	18.3%	12.8%
	전문계고	7.4%	6.6%	39.3%	46.7%
	합계	30.3%	18.5%	25.3%	26.0%
야간자율학습	중학교	2.6%	3.7%	15.7%	78.0%
	일반계고	30.0%	29.3%	23.2%	17.4%
	전문계고	3.5%	3.5%	23.0%	70.0%
	합계	16.7%	16.6%	20.4%	46.3%
방학 중 보충수업 ·자율학습	중학교	7.9%	11.6%	24.7%	55.8%
	일반계고	35.6%	28.6%	23.1%	12.8%
	전문계고	4.7%	2.3%	28.0%	65.0%
	합계	21.5%	18.7%	24.2%	35.6%
0교시(아침보 충수업)	중학교	7.5%	7.3%	12.9%	72.3%
	일반계고	22.0%	5.6%	8.8%	63.7%
	전문계고	9.4%	5.1%	9.4%	76.2%
	합계	15.0%	6.2%	10.2%	68.6%
주말자율학습 ·보충수업	중학교	2.3%	3.3%	11.5%	82.9%
	일반계고	13.7%	9.0%	14.9%	62.3%
	전문계고	3.5%	1.2%	11.4%	83.9%
	합계	8.3%	5.8%	13.2%	72.7%

○ 보충수업, 방과후학습, 자율학습 등에 학생들이 어떻게 참가하는지 (교사) - 학교급별 분석

	학교	강제적	반강제적	자발적	참여하지 않음
방과후학교 ·보충수업	초등학교	13.9%	23.0%	50.3%	12.9%
	중학교	20.8%	35.0%	42.6%	1.6%
	고등학교	27.0%	46.7%	25.2%	1.1%
	합계	21.3%	36.6%	37.6%	4.6%
야간자율학습	초등학교	11.0%	17.6%	9.1%	62.3%
	중학교	12.3%	17.3%	21.8%	48.8%
	고등학교	18.9%	44.3%	29.9%	6.9%
	합계	14.7%	28.9%	21.6%	34.8%
방학 중 보충수업 ·자율학습	초등학교	13.1%	27.5%	25.1%	34.3%
	중학교	16.6%	30.3%	33.9%	19.2%
	고등학교	19.9%	45.4%	28.4%	6.4%
	합계	16.9%	35.9%	29.0%	18.1%
0교시(아침보 충수업)	초등학교	16.6%	18.0%	9.1%	56.3%
	중학교	17.6%	16.8%	6.9%	58.7%
	고등학교	20.8%	19.5%	6.7%	53.0%
	합계	18.5%	18.6%	7.4%	55.5%
주말자율학습 ·보충수업	초등학교	7.8%	16.4%	12.7%	63.1%
	중학교	7.5%	12.8%	8.8%	71.0%
	고등학교	11.7%	25.4%	22.4%	40.6%
	합계	9.3%	19.3%	15.6%	55.8%

정규 수업 외 학습을 강제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애초에 학습이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결코 낮지 않은 비율이다. 또한 중학교나 전문계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만 보면 여전히 강제적/반강제적으로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을 시킨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다.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등이 이제는 중학교, 초등학교에도 제법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제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학부모들이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으로 자녀들이 학교에 오래 있기를 바라는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학부모)

학교에서 책임지고 강제로라도 공부시켜주길 바래서	양육·가사노동이 부담스러워서	학교 말고는 지역 사회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놀거나 배울 만한 곳이 없어서	일 때문에 집을 비워두는 시간이 많아서	기타
44.5%	5.9%	28.5%	11.9%	8.9%

학교에서 자녀들을 강제로라도 공부시켜주길 바란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온 이유는 역시 입시 때문으로 보인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공교육 내에서 학습하는 시간이 줄면 그 만큼 사교육에 기대야 하는 부분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학교 말고는 지역 사회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놀거나 배울 만한 곳이 없어서”라는 답 또한 28.5%로 꽤 높게 나왔다. 이는 학교 이외에 지역사회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 학습시설이 얼마나 부족한지도 보여준다. 학교에서 강제로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시키지 않으면 사교육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을 의무화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에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적 교육적 공공시설들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기타 응답 중에서는 “학교에 오래 남아있길 바라지 않는다”와 같은 답이 가장 많았다.

4. 학교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

○ 다음 경기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권리들이 현재 학교에서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학생, 학부모) / 다음 경기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권리들이 보장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교사)

구타기합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매우 잘 보장됨	잘 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6.8%	24.1%	24.2%	14.4%	30.4%
학부모	4.7%	38.0%	31.1%	6.4%	19.7%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77.0%	20.0%	2.2%	0.5%	0.3%
복장, 두발 등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매우 잘 보장됨	잘 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2.3%	8.1%	25.4%	56.1%	8.1%
학부모	4.1%	28.1%	40.4%	21.2%	6.4%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35.1%	46.5%	16.4%	1.5%	0.4%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매우 잘 보장됨	잘 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10.6%	23.5%	21.1%	31.2%	13.7%
학부모	10.5%	42.0%	26.9%	14.5%	6.0%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58.1%	37.4%	4.1%	0.3%	0.1%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					
	매우 잘 보장됨	잘 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4.6%	19.0%	30.9%	26.1%	19.5%
학부모	4.3%	36.3%	37.0%	12.5%	9.9%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53.3%	40.5%	5.7%	0.3%	0.2%

일기·수첩·휴대전화 등 사적 물건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의적인 소지품검사·압수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

	매우 잘 보장됨	잘 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7.4%	21.7%	23.2%	33.7%	13.9%
학부모	5.8%	39.1%	33.6%	12.0%	9.6%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34.4%	42.6%	18.6%	3.5%	0.8%

명찰 착용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교육비 납부 여부 등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매우 잘 보장됨	잘 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8.1%	23.9%	25.9%	23.5%	18.5%
학부모	7.2%	49.1%	25.1%	8.8%	9.8%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45.7%	41.2%	10.7%	1.7%	0.6%

자유롭게 생각하고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진술 등을 강요받지 않으며 원하는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매우 잘 보장됨	잘 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23.5%	32.0%	10.7%	10.4%	23.3%
학부모	17.0%	54.8%	13.2%	4.1%	10.9%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59.2%	34.8%	4.5%	1.0%	0.6%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언론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매우 잘 보장됨	잘 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12.9%	28.9%	19.3%	12.4%	26.5%
학부모	9.1%	47.5%	24.4%	5.3%	13.6%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56.2%	38.9%	4.0%	0.7%	0.2%

자유롭게 자치활동을 하고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매우 잘 보장됨	잘 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	----------	-------	-----------	------------	-------

학생	10.2%	30.5%	19.2%	13.4%	26.7%
학부모	8.4%	48.5%	22.3%	6.7%	14.1%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58.3%	35.2%	5.8%	0.5%	0.3%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 참여할 권리					
	매우 잘 보장됨	잘 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5.0%	13.5%	20.3%	31.1%	30.1%
학부모	3.6%	30.1%	32.8%	15.0%	18.5%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38.0%	45.1%	14.9%	1.4%	0.6%
안전하고 차별없이 급식을 제공받고 급식에 대한 정보를 알고 결정에 참여할 권리					
	매우 잘 보장됨	잘 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12.7%	26.7%	20.0%	24.5%	16.2%
학부모	8.2%	43.8%	25.6%	11.3%	11.1%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58.3%	37.1%	4.0%	0.6%	0.0%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매우 잘 보장됨	잘 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12.5%	37.2%	20.5%	14.7%	15.2%
학부모	9.8%	57.3%	19.2%	4.6%	9.1%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63.4%	32.5%	3.5%	0.4%	0.2%
성별, 종교, 나이, 출신국가, 언어, 장애, 외모, 임신·출산, 가족상황, 인종, 사상·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매우 잘 보장됨	잘 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12.8%	24.3%	18.4%	16.9%	27.6%
학부모	9.9%	44.7%	22.9%	5.5%	17.0%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72.5%	25.1%	1.8%	0.5%	0.1%
징계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매우 잘 보장됨	잘 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8.0%	20.1%	16.0%	13.5%	42.4%
학부모	5.4%	39.1%	20.7%	5.1%	29.7%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65.9%	31.3%	2.4%	0.4%	0.1%

학부모들은 대체적으로 학생인권이 잘 보장된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다. 학생들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많은 수가 답한 항목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은 잘 보장된다고 답한 것에서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학생들의 인권 상황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인권 상황 사이에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인권 상황이나 생활을 잘 모르기 때문으로도 풀이해볼 수 있다. 학생들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이 많은 한편으로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는 다수의 학생들이 스스로의 인권에 대해 잘 모르고, 학생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들에 대해 자신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생들에게도 이미 많이 알려진 두발, 복장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은 잘 보장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교사들의 경우에는 학생인권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필요성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각각의 인권 내용들에 대해서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한 교사들이 매우 많았고, 특히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고 참여할 권리, 강제로 학습하지 않고 쉴 권리 등에서는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5. 교 권

○ 누구로부터 교권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교사)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다
교육과학기술부	52.5%	34.6%	12.0%	0.9%
교육청	40.2%	43.3%	15.6%	0.9%
학교관리자	36.7%	40.5%	20.7%	2.1%
학부모	18.4%	43.8%	33.4%	2.2%
학생	10.2%	29.6%	44.1%	16.0%

보통 교권을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의 문제로 보는 통념과는 달리 교사들은 교권을 침해하는 주체로 교과부, 교육청 등 국가기관이나 학교의 관리자를 더 많이 꼽았다. 학생들은 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더 많았다.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답변이 그렇지 않다는 답변보다 조금 더 많았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되는 것으로 보는 논의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 학교에서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교사)

학생에 대한 통제 강화	비민주적 학교 운영과	교사의 기본적 권리와
--------------	-------------	-------------

	교육행정 개선	교육적 자율성 인정
3.0%	60.9%	69.4%
교육예산 확대 및 지원 강화	입시경쟁교육의 해소	학교가 책임지는 민원 창구 개설
5.3%	38.2%	4.4%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기본적 권리와 교육적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답변 다음으로 비민주적인 학교운영, 교육행정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또 입시경쟁교육을 해소하는 것도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많이 꼽혔다. 학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교권이 보장된다는 답변은 3.0%로 아주 적어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교권을 침해하거나 저해하는 것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6. 학생간 폭력

○ 학생간 폭력 해결을 위해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학부모, 교사)

	학생 통제·규율 강화	인권교육 실시	효과적 의사소통 방법 교육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 운영 강화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실시	복지제도 교육제도, 환경 개선	기타
학부모	12.1%	15.8%	25.6%	21.3%	16.3%	8.3%	0.6%
교사	4.3%	11.2%	22.4%	23.3%	26.3%	10.6%	1.9%

앞서 학생인권 보장이 학교폭력(학생간 폭력)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그리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학생간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학부모와 교사에게 묻자 학생들에 대한 통제와 규율강화가 필요하다는 답은 적게 나왔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주로 “효과적 의사소통 방법 교육”,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실시”,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 운영 강화”, “인권교육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간 폭력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7. 교사들이 인권교육을 받아본 경험

○ 인권교육을 다음의 과정들을 통해 받아본 적이 있는지 (교사)

	교대사대 교육과정	교육청주관 신규교사 교육과정	교육청주관 1정연수	자율연수
있다	10.3%	4.8%	6.5%	45.6%
없다	89.7%	95.2%	93.5%	54.4%

교사들의 인권교육 이수 경험은 아주 적었다. 하지만 자율연수를 통해 인권교육을 접한 경우는 비교적 많은 편이었는데 이는 인권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열어왔기 때문에, 흥미와 필요를 가진 교사가 적극적으로 이수하는 경우이다. 현재 교사가 되기 위한 대학과정, 그리고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에서는 거의 인권교육을 접할 수 없는 실정이다. UN 아동권리위원회가 교육행정가나 교사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학교가 인권친화적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 사범대학, 그리고 교육당국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8. 학교에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 바뀌어야 할 점 등

○ 학교가 학생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지 (학부모)

입시와 취업에 도움이 되는 유능한 입시전문기관	학생들을 통제해주는 관리기관	인문학적·과학적·실용적 지식의 전달기관	학생들의 가치관과 인생에 도움을 주고 지도하는 기관
10.4%	3.7%	11.8%	74.0%

○ 현재 학교가 하고 있는 역할에 가장 가까운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학부모)

입시와 취업에 도움이 되는 유능한 입시전문기관	학생들을 통제해주는 관리기관	인문학적·과학적·실용적 지식의 전달기관	학생들의 가치관과 인생에 도움을 주고 지도하는 기관
36.4%	29.8%	17.1%	16.7%

학부모들에게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지, 그리고 연이어 그럼 현재 학교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74.0%의 학부모들은 학교가 “학생들의 가치관과 인생에 도움을 주고 지도하는 기관”이길 바란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실의 학교가 하는 역할은 입시기관이거나 통제 관리기관이라고 생각한다는 답이 제일 많이 나타났고, 현재 학교가 하는 역할이 “학생들의 가치관과 인생에 도움을 주고 지도하는 기관”이라는 답은 16.7%에 지나지 않았다. 학교가 올바른 교육기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입시기관이자 학생들을 통제하는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다.

○ 학교가 더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의식이 가장 많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학생	교장/교감선생님	선생님	학부모
학생	21.9%	37.9%	31.6%	8.7%
학부모	14.4%	42.2%	32.9%	10.3%
교사	3.6%	65.7%	21.7%	8.9%

학생, 학부모, 교사는 모두가 학교가 더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
들의 의식이 가장 많이 변해야 한다고 꼽았다. 현재 학교관리자들이 학교 운영에 대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학교를 민주적·인권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지
적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교사가 바뀌어야 한다는 응답도 많았다.

○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2개 선택)

학생	인권교육의 부재와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의식	불합리한 학교 규정 및 징계 등		교육·복지예산 부족과 열악한 교육환경
	38.3%	54.1%		14.5%
	빈부격차, 차별, 불황 등 사회적인 모순	입시위주의 교육정책	학교의 폐쇄적인 의사소통 구조	기타
	15.4%	40.5%	25.6%	
학부모	인권교육의 부재와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의식	불합리한 학교 규정 및 징계 등		교육·복지예산 부족과 열악한 교육환경
	45.3%	30.4%		17.7%
	빈부격차, 차별, 불황 등 사회적인 모순	입시위주의 교육정책	학교의 폐쇄적인 의사소통 구조	기타
	16.3%	47.9%	22.0%	
교사	인권교육의 부재와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의식	불합리한 학교 규정 및 징계 등		교육·복지예산 부족과 열악한 교육환경
	44.5%	14.6%		15.8%
	빈부격차, 차별, 불황 등 사회적인 모순	입시위주의 교육정책	학교의 폐쇄적인 의사소통 구조	기타
	11.9%	55.1%	28.7%	

학생, 학부모, 교사는 모두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이유로 “인권교육의 부재와 사람들
의 변하지 않는 의식”, 그리고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교육주체들의 의식 변
화와 동시에 교육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 셈이다. 학생들은 학교 규정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많이 꼽았으나 학부모들은 학생들보다 더 적게, 교사들은 그보다도 더 적게 학교 규정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이나 교사들보다 학생들이 자기 생활에 직접 간섭하는 규정의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2개 선택)

학생	인권교육 강화	학교 의사결정에 학생 교사 등 민주적 참여 보장	입시경쟁교육 해소
	25.9%	46.5%	45.3%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	인권침해 구제수단 강화	교사의 업무 경감 및 지원 강화	기타
	39.5%	20.3%	10.0%	
학부모	인권교육 강화	학교 의사결정에 학생 교사 등 민주적 참여 보장	입시경쟁교육 해소	
	27.2%	48.3%	50.2%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	인권침해 구제수단 강화	교사의 업무 경감 및 지원 강화	기타
	38.1%	10.0%	10.2%	
교사	인권교육 강화	학교 의사결정에 학생 교사 등 민주적 참여 보장	입시경쟁교육 해소	
	6.1%	54.7%	65.3%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	인권침해 구제수단 강화	교사의 업무 경감 및 지원 강화	기타
	16.3%	3.5%	45.3%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견도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입시경쟁교육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학생 45.3%, 학부모 50.2%, 교사 65.3%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교사 등 민주적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는 답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학생들과 학부모들 중에는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들이 더 많고, 교사들은 “교사의 업무 경감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들이 더 많다. 교육예산을 더 확대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